

대구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

## 1. 검토경과

- ☐ 제 출 자 : 대구광역시장
- ☐ 제출일자 : 2023년 6월 2일
- ☐ 회부일자 : 2023년 6월 5일

## 2. 제안이유

- ☐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, 지역 대학·기업, 다른 행정 기관 등과의 연계·협력 체계 구축 및 협의체 구성·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.

## 3. 주요내용

- ☐ 협력체계 구축의 대상·범위, 협의체 구성 근거 규정(안 제16조)
  - 범위 : 일자리 창출 및 조례에서 정한 사업 추진
  - 대상 : 중앙행정기관, 다른 자치단체, 대학, 기업, 일자리 관련 단체 등
  - 협의체 구성 근거 및 여비 등 지급 근거 신설
- ☐ 보조금 지급 근거 규정 정비(안 제17조)

## 4. 검토의견

### □ 제안취지 및 적법성 검토

-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앙행정기관, 다른 자치단체, 대학, 기업 등과의 폭넓은 거버넌스를 구성하고자 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, 그 내용이나 체계는 자치사무의 범위 내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# □ 주요 검토사항

#### ○ 협력체계 구축의 대상·범위, 협의체 구성 근거 마련(안 제16조)

- 안 제16조(협력체계 구축) 제1항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의 범위를 일자리 창출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\*으로 하고, 그 대상은 중앙행정기관, 다른 지방자치단체, 대학, 기업, 일자리 관련 기관 및 단체로 정하였음.

\* 조례의 사업 : 일자리 창출 사업, 일자리 지원시설 설치·운영, 취업지원 사업, 청년·중장년 일자리 지원, 일자리 영향평가, 근로 및 고용환경 개선, 임금수준의 향상, 고용 촉진 및 유지 지원, 고용 친화 기업 지정 등

- 제2항에서는 시장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·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,
- 제3항에서는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외부 위원 등에게 여비 등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하였음.

## ○ 보조금 지원의 상위법률 근거 조항 정비(안 제17조)

- 안 제17조(보조금 지원)는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6) 및 제32조의2를 근거로 하고 있던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2조의2가 삭제됨에 따라 조례에서도 이를 삭제하는 것임.

## □ 검토 결과

-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기업, 대학, 관계 기관·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로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, 폭넓은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(통합 거버넌스) 구축에 대해서는 최근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그 필요성과 시급성이 보고된 바 있으며, 조례로 그 근거를 마련하여 협력체계 구성과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은 의미 있는 것으로 사료됨.

### ‘대구 인문계열 대졸자의 취업활성화를 위한 지원방향’

[대구경북연구원 / 연구 2022-62(2022.12.) / 김세나]

제5장 제4절 주요 내용 일부 발췌 정리

- 청년인력양성(대학)-일자리 연계(지자체)-지역산업발전(기업) 통합 거버넌스 마련 시급

① (내부) 대구시 내부의 총괄기구 마련

② (외부) 산업기관 간 연계·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총괄 거버넌스 마련

## 6) 「지방재정법」

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·단체에 기부·보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 <개정 2014. 5. 28.>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2. 국고 보조 재원(財源)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3.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
4.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## 7)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(2021. 1. 12. 제정)에 따라 삭제

- 개정 조례안의 내용과 체계는 관계 법령과 자치사무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구성된 것으로 사료되며,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음.
- 다만, 대구시에는 ‘대구광역시 고용·노사민정협의회’<sup>8)</sup>라는 일자리 정책 협의와 고용현안 해결을 위한 최상위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하고 있으므로, 개정 조례안의 취지에 따른 협의체의 운영에 있어서는 실무적 수준에서의 유연한 협의와 연계협력이 가능하도록 역할 구분과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
-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#### 8) [대구광역시 고용·노사민정협의회]

- 정의 : 「대구광역시 고용·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의거 설치·운영 중인 지역 일자리, 인적자원개발, 노사안정과 협력 증진 등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최상위 협의체
- 주요기능
  -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
  -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발전에 관한 사항
  -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
  - 산업평화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
  - 그 밖에 지역 고용·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주요 위원 : 시장(위원장), 노동계(한국노총 등), 경영계(경총, 상의 등), 민간(변호사, 시민단체, 대학교수 등), 정부(지방고용노동청, 중기청 등)